

2019 지방직 7급 행정학(B책형) 해설 (2019.10.12. 시행)

공단기 행정학 전임 김만희 교수

<마니쌤 총평>

시험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지방직 7급은 무난한 수준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만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6번, 10번 문제의 일부 지문처럼 생소한 내용을 넣었지만 답이 워낙 명확하여 정답을 도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 봅니다.

10번 문제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일 수는 있지만, 수업시간에 말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명백히 보여주듯 이제 7급과 9급의 구분이 점점 흐려지고 있으며, 7·9급 구분없이 해야 할 것만 정확하고 명쾌하게 정리하면 행정학은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으며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2019년의 시험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2020년의 합격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지나간 시간은 흘러간대로 두고 지금 당장 주어진 시간부터 차근차근 무소의 뿔처럼 걸어나간다면 분명 합격이라는 결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2020년에는 더 많은 수험생들이 “마니행정학 ‘덕분’”에 합격했다는 소식 들려주길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열강으로, 연구로 응원하겠습니다!

열강+열공=합격=마니행정학

노량진 연구실에서, 김만희

문 1. 로위(Lowy)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 ①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③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④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정답 : ①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기본서 1권 p.182

<정밀해설>

- ①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유형은 재분배정책이다.
- ② 규제정책은 개별적 행위에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유형이다.
- ③ 구성정책은 행위의 환경에 강제력이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유형이다.
- ④ 분배정책은 개별적 행위에 강제력이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유형이다.

▷ 강제력에 따른 분류

구분		강제력 적용 영역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강제력 행사방법	직접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간접적	분배정책	구성정책

문 2. 다음 중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 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 ㄷ. 수수료 감면을 위한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
- ㄹ.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주민투표

- ① ㄱ,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기본서 2권 p.430, 432, 435, 437

<정밀해설>

- ④ 현행 법률상 ㄱ, ㄴ, ㄷ, ㄹ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 ㄱ.[O]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회는 주민소환 제외대상이다.
- ㄴ.[O]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 제외 사항이다.
- ㄷ.[O]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 조례 개정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 ㄹ.[O] 정원이나 신분, 보수 등과 같은 인사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예외대상이다.

문 3. 다음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 체제를 선호한다.
- ㄴ.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 ㄷ.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한다.
- ㄹ. 행정관리의 이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 ㅁ. 집권적 계층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① ㄱ, ㄹ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정답 : ②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기본서 1권 p.153~157

<정밀해설>

- ② ㄱ, ㄴ, ㄹ이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 ㄷ.[X]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한다.
- ㅁ.[X] 분권적 탈계층제를 통해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한다.

문 4.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 ②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④ 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기본서 2권 p.137

<정밀해설>

- 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문 5.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기본서 1권 p.149~153

<정밀해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하며 중범위 이론에 초점을 두고 정치체제가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제약한다고 보았다.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은 합리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제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며, 사회현상은 개인의 선호와 제도의 결합으로 인식한다.
-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비효율적인 제도의 존재와 제도의 변형이 쉽지 않으며 결렬된 균형에 의해 제도의 급격한 중단이나 변화가 우연적으로 일어난다고 본다.
-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문 6.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딩(Vedung)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sticks), 유연적 도구(carrots), 정보적 도구(sermons) 등으로 유형화한다.
- ② 권위(authority)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은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 ③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④ 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훈은 공공기관을 전달체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기본서 1권 p.184~185

<정밀해설>

- ④ 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훈은 공공기관을 전달체제로 활용하지 않는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문 7. 다음 중 예산 원칙의 예외를 옳게 짚지은 것은?

한정성 원칙	단일성 원칙
① 목적세	특별회계
② 예비비	목적세
③ 이용과 전용	수입대체경비
④ 계속비	기금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기본서 2권 p.183~185

<정밀해설>

- ④ 한정성의 원칙은 주어진 목적, 규모, 시간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는 이용, 전용,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
한편, 단일성의 원칙은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단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단일성 원칙의 예외로는 추가경정예산, 기금, 특별회계 공기업예산이 있다.

문 8.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Simon)의 실질적(substantive) 합리성은 행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② 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진화론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 ③ 기술적 합리성은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시키는가, 즉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 ④ 사이먼(Simon)은 인간이 실질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 ②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기본서 1권 p.102

<정밀해설>

- ② 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문 9.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목(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 ② 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도(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③ 롤즈(Rawls)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뉜다.
- ④ 슈버트(Schubert)는 공익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1권 p.94~98

<정밀해설>

- ④ 슈버트(Schubert)는 공익과정설의 입장으로 보았다.

문 10.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업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 ②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가 지배했다.
- ③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력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 ④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Appleby)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1권 p.82~85, 118~120

〈정밀해설〉

- ③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는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과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정부에 적용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 ①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이 강화되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은 높아지지만, 정책수행과정에서는 비능률을 초래한다.
- ② 미국 건국 직후는 분권파와 중앙집권파가 갈등을 빚는 시기였으므로 특정하기 곤란하지만, 이후에는 해밀턴주의로 진행되다가 제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당선되고 나서는 제퍼슨주의(Jeffsonianism)로 변화하게 되었다.
- ④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Appleby)는 행정은 경영과 다르다고 보는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하였다.

문 11. 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②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의 한계이다.
- ③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감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④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재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정답 : ①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2권 p.18~21, 27~29

〈정밀해설〉

- ①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킴으로써 인사행정의 집권화를 야기하였다.

문 1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본다.
- ② 엘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론론은 '감동자와 부하의 관계'를 만족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 ④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성취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정답 : ②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1권 p.343~346, 352~353

〈정밀해설〉

- ② 엘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하는 좌절과 퇴행을 주장하였다.
-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론은 욕구가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욕구가 순차적·계층적으로 유발되지만, 후진이나 퇴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론은 '감동자와 부하의 관계'를 불만족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 ④ 포터와 로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직무성취의 수준이 직무만족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문 13.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7.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L. 검사
 C.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R. 도지사의 비서
 M. 국가정보원의 직원

- ① \neg, \sqsubset, \geq
② \neg, \geq, \square
③ \perp, \sqsubset, \geq
④ $\perp, \sqsubset, \square$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2권 p.43~47

〈정밀해설〉

- ④ 특정직 공무원은 특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개별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나, 다, 라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나.[O] 검사는 검찰청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 다.[O]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 마.[O] 국가정보원의 직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 바.[X]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정부직공무원이다.
- 라.[X] 도시사의 비서는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별정직 공무원이다.

문 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시상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③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대립형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④ 기관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2권 p.380~381

〈정밀해설〉

- ④ 기관대립형의 집행기관은 기관통합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 15.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이다.
-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변동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②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2권 p.152~155

<정밀해설>

- ② 공무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수령할 경우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의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 ①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는 등록의무자이다.
- ③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3천만 원이다.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을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변동을 퇴직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강임(降任)·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문 16.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안일의 경향을 가진다.
- ②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 ③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직원을 통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④ 브레넌과 뷰캐넌(Brennan & Buchanan)의 리바이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정답 : ①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1권 p.39

<정밀해설>

- ① 파킨슨은 본질적 업무의 증가 없이 비본질적 업무가 증가하는 것을 업무배증의 법칙으로 설명하였다.

문 1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령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201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2권 p.440

<정밀해설>

- ③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문 18.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2권 p.327~328

<정밀해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19. ㉠, ㉡에 해당하는 권력모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들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 (㉡)은 정치권력에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

㉡

- | | |
|-------------|-------------------|
| ① 밀즈의 지위접근법 | 달의 다원주의론 |
| ② 밀즈의 지위접근법 |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
| ③ 헌터의 명성접근법 | 달의 다원주의론 |
| ④ 헌터의 명성접근법 |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1권 p.205~209

<정밀해설>

③ ㉠은 헌터의 명성접근법이고 ㉡은 달의 다원주의론에 대한 설명이다.

문 20.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 ②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합리모형의 유용성이다.
- ③ 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④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0 마니행정학 2권 p.211

<정밀해설>

-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결정방식으로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 ②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합리모형의 유용성이다.
- ③ 단절균형모형은 사후적인 분석으로는 적절하지만 단절 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미래지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